2019 서른 여덟번째 인권주일 자료집

교회와 인권

천주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전면 취소!
생명과 평화의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9일 기도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전면 취소!
생명과 평화의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9일 기도

목차

여는 말
인권주일 강론자료집을 준비하며 06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08

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11

강론글 1.
교황과 소녀의 호소 21
양기석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위원장, 지동성당 주임 사제

강론글 2.
우리는 과연 사형이라는 형벌을 알고 있을까? 28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강론글 3.
잠시 멈추어 생각할 시간 36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강론글 4.
국가 범죄는 국가가 책임져라 40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46

인권주일 강론자료집을 준비하며

인권과 평등을 향해 걸어온 30년, 천주교인권위원회가 2019년 인권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종 프란치스코께서는 지난 2016년 8월 교서를 통해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통합 부서 설립을 발표하시며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을 강조하시면서 새로 설립된 부서는 이민자들, 궁핍한 이들, 아픈 이들, 배척된 이들, 사회적으로 차별된 이들, 무력 분쟁과 자연 재해의 희생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업자들, 모든 형태의 노예와 고문 희생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30년 전, 우리 사회 인권옹호자의 길을 자청하며 첫발을 내딛은 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과 실천으로 지키며 걸어온 길, 권리를 빼앗기고 불평등과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겠다는 신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서가 교황청에 설립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고 설렜습니다. 돌아보면 때론 힘들고 때론 부족한 30년이었지만 우리의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과 만나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니 행복했습니다.

매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 교회가 정한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을 선정하여 인권주일 강론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간의 존엄과 세상의 평화 더 나아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인간 발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사형제도폐지, 차별과 혐오금지, 과거사청산 등 네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위기를 넘어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기후난민’을 양산해 내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기후변화대응) 복수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길일 것입니다.(사형제도폐지) 우리는 일상 중에서 아주 쉽게 차별을 할 수도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과 인권의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합니다. (차별과 혐오금지)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청산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과처사 청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주일에 각 본당에서 보내주시는 2차 헌금과 특별후원금을 근간으로 정기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인권주일 자료집으로 강론도 해주시고 인권주일 2차 헌금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후원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8일 서른여덟 번째 인권주일을 맞이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드림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관심에 가톨릭교회가 함께 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의 곁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켜내고 이 땅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사제, 수도자, 자매, 형제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입니다.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산하 인권위원회로 시작하여, 1993년 천주교인권위원회로 독립 출범하였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올해로 31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간첩사건들의 진상규명활동과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있던 대표적인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0여년의 노력 끝에 재심 무죄를 이끌어 냈고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날조와 고문으로 만들어진 조작간첩사건들의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 악법들의 폐지와 개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의를 우리 사회에 증거 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군, 검찰, 경찰, 구금시설 등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응하고 공안기구들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폭력과 손배소송 등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사고파는 집을 짓기 위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부수는 재개발과 뉴타운의 환상에 밀려 점점 도시 변두리로 쫓겨 가는 서민들, '시설'이라는 감옥에 갇혀 인권 침해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생활인들, 거대한 국가권력에 피해를 입고 제대로 호소 할 곳 하나 없어 절망하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의 곁에 서 있고 싶습니다. 쫓겨나고 내몰리는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곁을 지켜야 할 모두의 이름입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눈물 흘리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하며 그들 곁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유엔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인권정례검토(URP)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비롯한 수많은 조약기구들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우리 사회가 뒤처지지 못하게 견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지구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사형폐지 활동가들과 살인피해 가족들을 만나며 아시아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무료인권법률상담을 진행하며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거부하고 어렵고 힘든 고비를 꿋꿋이 이겨내며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낌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가톨릭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늘을 있게 해 주신 유현석 변호사님과 이돈명 변호사님은 비록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지난 9년간 80여건의 중요한 공익소송들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무지개농성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쟁없는세상, 초등성평등연구회,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에 이돈명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과 함께, 보다 성숙하고 공신력 있는 공익인권단체로서의 외형적 조건들도 갖추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4년 10월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고, 2005년 6월 16일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10월 5일자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되었고, 2017년 9월 29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게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기부금을 낸 후원회원 분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로부터 발부받은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현행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후원회원 분들이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中) 는 말씀처럼 용기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공익소송팀

○ 월요 법률상담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매주 1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상담실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교우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우들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해 6월 16일(일) 낮 12시30분~4시 서울대교구 이문동성당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모든 공익소송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들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우리 위원회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들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교우들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익소송 사건 관련 <오마이뉴스> 연재

종료된 공익소송 사건의 진행 과정 및 해당 주제의 인권 실태를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제목으로 담당 변호사, 당사자, 관련자가 기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연대사업팀

여덟 번째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는 선거권 연령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하여 노력한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격월간으로 전환된 소식지 '교회와 인권'을 올해도 발간하였습니다. 매 격월로 5000여 부수의 소식지를 전국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령에 대한 간략한 해설 △판례 원문과 평석 △수용자 처우 영역별 판례 현황과 개선(변경) 과제가 포함되는 가칭 '감옥법령·판례 연구'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감옥 판례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업팀

서른 일곱번째 인권주일 강론자료집 '교회와 인권 2018'을 발간하여 전국 4000여 곳의 성당과 수도회, 공동체 등에 배포하였고 인권강론 강사 파견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사회교리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인 '교황문헌 읽기 모임'을 기획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발행한 청소년과 함께 읽는 인권이야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PDF 파일로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청 본당에 한하여 책자를 배송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운동

○ 사형제 폐지/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청원서 제출과 사형제 헌법소원 청구

올 한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지난 2월1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2018 대림부터 이어온 사형제도폐지와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명에는 염수정 추기경님과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을 비롯한 현직 주교단 전원과 105,179명의 천주교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형제도폐지기원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가 올해는 10월 10일(목) 저녁 7시 명동 가톨릭회관 앞마당에서 가톨릭평화방송과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배기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장 주교 등의 인사말을 비롯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 이은미,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밴드 자전거 탄 풍경, 생활성가 가수 나혜선, 장기기증 가족들로 이루어진 생명의 소리 합창단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후 2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사형확정자들을 만나고 있는 공지영 작가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매일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현대일 신부님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20대 국회 사형제도폐지 특별법 발의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목) 오전에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하여 7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은 15대 국회부터 매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번이 총 여덟 번째 입법 발의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2019년 7월 29일(월)~8월 3일(토)까지 강정마을을 출발하여 5박 6일 동안 서귀포~남원~표선~성산~구좌~조천 등을 걸어 제주시청 앞에 도착하는 일정의 2019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특설무대에서 열린 범국민문화제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연인원 2천여명이 참여한 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 해군기지로 고통 받아 온 강정주민들과 제주 제2공항 문제로 싸우고 있는 성산 주민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2012년 첫 번째 대행진부터 8년째 참가한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을 비롯하여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님, 복음화실장 황태종 신부님 등 사제 수도자 평신도 50여명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부지 선정 과정과 이후 찬성주민들 지원에 이르기 까지 해군, 제주도정, 경찰,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들이 협의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강제로 밀어붙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사과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하였고 발표 직후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 위한범도민대책위 등 3개 단체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찰폭력 피해자 공동대응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마무리 되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대국민 보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국민 보고대회 전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 단체들 대표들을 만나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폭력에 대한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경찰청 훈령에 의거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이끌어 냈으며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경찰청 앞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장 면담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비로소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 보고서와 사과를 받아내는 의미 있는 결과로 마무리 된 점은 국가폭력 피해자 연대 활동의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8월말, 언론을 통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사건이 보도된 직후, '프락치' 양심선언을 한 김아무개씨(이하 제보자)가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직접 찾아 신변보호와 사건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제보자를 심층 면담한 후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우리 위원회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신변보호결정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감넷은 변호사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결성하고 3일간 집중적으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등이 제안하여 새롭게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제보자와 사찰피해자들이 함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민간인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전·현직 국정원장들과 '프락치' 공작에 참여한 핵심 간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하였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구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공식 면담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장 국감날에 맞춰 국정원 앞에서 출근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하루 투쟁을 펼치고 '프락치' 공작사건진상규명과 국정원법개정을 통한 국정원 대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반대 활동

현재 제주 성산에 건설을 추진 중인 제주 2공항이 성산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국방부가 공군 남부탐색구조대 제주 창설 발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진행되는 제주 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한 '제주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 출범하며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이 시작되었고 우리 위원회도 함께 연대를 결정하였습니다.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전면 취소를 기원하는 9일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구금시설 인권옹호 활동

○ 감옥법령집 개정판 발간

2019년 7월 15일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아래 법령집)을 발간했습니다. 법령집에는 최

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3년 7월 법령집의 초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 사이 개정된 법령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2015년 전면 개정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도 새로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비공개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 공개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실었습니다. 넬슨만델라규칙의 번역본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연일 폭염이 계속되던 2018년 8월 20일 '폭염수용'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혹서기에 교정시설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시설의 크기와 인원을 고려하여 선풍기 설치 대수와 위치, 성능 등을 개선해야 하고, 에어컨 설치 등 냉방설비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교토변호사회는 2018년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형집행 관련 법령으로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를 정하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의 온도가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수용자의 작업량을 줄이거나, 이송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재난'의 하나로 단순히 '참고 견디어야 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용자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구속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는 수용자가 처해있는 환경과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진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 국가인권위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 극한기 난방을 주제로, 하반기에는 극서기 냉방을 주제로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방문조사 결과는 2020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8년 5월, 6월, 7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습니다(효력 시한 2019년 12월). 이에 5월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공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벌금형 등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6인의 재심(총 5건)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재심 청구를 원하는 다른 당사자의 경우, 변호인 조력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본인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미디어오늘>에 '집회 금지 성역을 열어온 사람들'을 주제로 연속기고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9월 9일 검찰총장에게 집시법 11조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중단, 과거 확정판결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요구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정보경찰이 △선거 시기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시민단체 사찰 △선거 판세를 분석과 함께 선거 전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안을 제안 △김무성·유승민 의원의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 분석 등 조사활동을 방해 △국가인권위 위원장 등 성향 분석과 업무 동향 파악 등 사찰을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5월 15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청와대는 공직자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이유로 정보경찰의 보고를 계속 받아왔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폐지되면서 정보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기관'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보경찰 폐지를 요구하며 △5월 14일 29개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7월 18일 공권력감시대응팀·민변·참여연대·경실련 등 인권·시민단체들의 청와대 앞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9월 30일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단

체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같은 날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10월 22일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 국회 전달 △10월 30일 국가인권위에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 등을 진행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TF

2018년 헌법재판소가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습니다(개선입법 시한 2020년 3월 31일). 9월 18일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5차 자유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한국의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5차 자유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5월 14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 관련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실제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에서 우리 위원회는 사형제와 감옥인권 분야를 집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토론회, 2019평등행진, #정당은응답하라, 평등정책

○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 '집회에서 만나요' 발간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광장과 거리로 나온 사회적 소수자들과 그들을 위협하고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혐오선동세력의 등장을 보며 더 자유롭고 안전한 집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민의 결과로 집회참가자들이 여러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대항적 말하기'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장소 마련, 경찰 대응, 기록과 후속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에서 만나요: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10권 단위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선거기간 특히나 심각해지는 혐오발언, 혐오선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는 '선거에서 혐오표현의 해악과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법제도적 대응, 언론의 역할, 국가기구와 시민사회의 역할,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2019평등행진과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직접행동

20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며 '2019평등행진 : 평화를 말하라'가 열렸습니다. 지난 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단독주최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조직위원회를 꾸려 33개 연대체와 단체의 공동주최로 평등행진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사전집회 '우리가 말한다'를 시작으로 을지로-종로-광화문 일대를 행진하여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 '우리는 원한다'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평등을 향한 외침에 1,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정당들의 의견이 궁금한 시민들과 함께 이메일 질의서를 발송하는 온라인 #정당은응답하라 직접행동을 통하여 1200여명의 시민들이 8개 정당/의원모임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의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오프라인 #정당은응답하라 직접행동도 진행하였습니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올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의 촉진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 16회 인권활동가대회

상반기에는 인권활동가대회가 있었습니다. <16회 인권활동가대회>는 '분단과 평화 사이'라는 주제로 북한산 생태탐방원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019 지속 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인권/시민운동을 고민하며 인권재단 사람과 인권운동더하기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71개 단체, 12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국인권보고대회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더하기 공동주최로 한 해의 인권의제를 돌아보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큰 이슈인 검찰개혁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는 인권대담의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강론글 1.

교황과 소녀의 호소

양기석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위원장
지동성당 주임 사제

2015년 환경을 주제로 한 최초의 사회교리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며 지구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를 포함한 여러 위기 상황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두 팔 벌려 품어주는 누이이자 어머니 같은 지구 생태계가 울부짖고 있다고 우리의 관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이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기”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

동방정교회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는 “인간이 하느님 피조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삼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 물, 흙,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모두 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연 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이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8)

과거 42만 년 동안 한 번도 넘지 않았던 이산화탄소 배출량 300ppm 기준이 1950년 넘어선 이후 현재는 400ppm을 넘어서 상태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히말라야산맥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만년설들이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발루와 키리바시 등의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들이 이번 세기 중반에 물에 잠겨 사라지고, 30억 명에 이르는 이들이 식수난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1도가 오를 경우 전 세계 밀생산량이 21%가 감소할 것이라 합니다.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난민이 발생하고, 지구 곳곳에서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급기야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기후난민이 10억 명에 이르러 핵 전쟁급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금 당장 기온을 낮추지 않으면 이번 세기 안에 곡식과 과일 등, 식용이 가능한 열매의 수확이 75% 이상 감소해서 ‘종의 멸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과도한 소비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생활양식, 생산과 소비양식, 그리고 오늘날 사회를 다스리는, 이미 확립된 권력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찬미받으소서. 5)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려면, 기후 위기의 원인이자, 가속화시키는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23)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시위’로 세상에 알려진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 회의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가 아닌 대서양 건너편 학교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희망을 바라며 청년들에게 오셨다고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나요? 당신들은 헛된 말로 내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경제성장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과학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외면할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 자리에 와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필요한 정치와 해결책이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긴급함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은 악마나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의견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아래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50%만 줄뿐입니다.*** *이는 또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연쇄반응을 초래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50%는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치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티핑포인트, 대부분의 피드백 루프 대기오염에 숨겨진 추가적 온난화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수치입니다. 기후 정의와 평등의 측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는 여러분이 공기 중에 배출해 놓은 수 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가 초래한 결과를 떠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는 50%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가 제시한 현재로서 최상의 가능성인 1.5도씨 아래로 머무를 수 있는 67%의 기회를 잡으려면 세계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20기가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숫자는 이미 350기가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u>어떻게 감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몇몇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척할 수 있습니까?</u>*** ***오늘날처럼 탄소 배출을 계속한다면 남아있는 탄소예산마저도 8년 반 안에 모두 소진되어 버릴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될 어떤 해결책이나 계획도 이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고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예산을 나타내는 이 수치는 매우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여러분이 배신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래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임을 피해서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연설과 행동에 찬사와 연대의 뜻을 보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생태계 위기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힘 있는 자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조차도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십니다. (찬미받으소서. 14)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도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자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면,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02-204)

1987년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개정된 8차 개정된 헌법의 전문에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는 대멸종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각계의 경고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 임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데 협력할 능력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배척당한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의 건설할 수 있느냐?"라는 젊은이들의 변화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13)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나 위험 또는 고통의 원천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창조주와 협력하도록 이끄는 출산의 고통이 됩니다.(찬미받으소서. 80)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Jeju Grand March for Life and Peace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아고치글라
2019년 7월 29일~8월 3일
NO TMT
Hong Kong

강론글 2.

우리는 과연 사형이라는 형벌을 알고 있을까?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1. 프롤로그

사형집행 중단의 날적이(日記)를 7,963일로 채워가는 은혜로운 밤입니다. 18년 전 이맘때쯤의 일로 기억합니다. 저는 다소 불순한 의도의 글쓰기를 마쳤는데, 그것은 대학원생 시절, 작지 않은 상금을 수중에 넣으려고 사형을 주제로 삼은 논문을 투고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저도 여느 평범한 시민의식이 그러하듯 형벌은 모름지기 저지른 죄에 응당한 되갚음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충실해 있었던 터라 국가가 범죄의 피해자를 대신하는 형벌의 목적은 공적 복수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즐겨 제시하는 논거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입니다. 간명하게 말하자면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정서가 사형이 형벌로 존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형을 감히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깨우치게 된 사실은 법감정이라는 것의 실체는 불분명하고 여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각색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맹목에 가깝게 형성된 허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을 뿐더러 불분명한 감정에 기대어 사형을 요구하는 것은 사형을 반드시 존속시켜야 마땅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견은 그때로부터 지금에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필자가 사형제도와 불편한 공생의 관계를 이어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국민 67.9%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형제도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응답한 국민 1,000명 가운데 67.9%가 사형이라는 형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한다면 우리 국민은 사형이 생명을 단절하는 형벌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그 실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형이 얼마나 선고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정적이지만 최소 923명에서 최대 1,310명에 이르기까지, 집계 방식이나 통계를 생산한 주체에 따라 제각기 다른 수치를 나타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름으로 사형 확정자를 집행한 내용은 다른 어떤 통계보다도 엄격하고 정확한 것이라야 합니다. 인간 존엄의 바탕이 곧 그 존재적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에 있기에 국가가 생명을 단절하는 형벌을 선택하여 부과한 것이라면 그 결과에는 단 한 명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와 독재가 전횡하던 정권에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이에 관하여 그 어떤 경로로도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을까요?

대다수의 국민은 사형의 집행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자를 성실하게 단죄해 왔다는 국가가 제시하는 그릇된 정보를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사 이래로 인류 사회에서 사형은 패륜적인 흉악범죄자를 건강한 시민들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반대자와 그 세력을 효과적으로 말살하는 방책으로 악용되어왔습니다. 조선의 국왕 가운데 순조는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917명의 백성을 국법을 바로 세운다는 미명 아래 사형의 형식을 빌려 참살하였고, 고종은 '병인박해'의 기간 동안 천주교를 믿는 백성들을 무려 약 8,000여 명이나 사형에 처했습니다. 좀 더 가까운 일제 강점 초기에는 국권의 회복을 위하여 의병활동을 행했던 이 땅의 수많은 우국지사들 또한 '적도처단례'라는 무시무시한 봉건적 법률의 표적이 되어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제주와 여수 그리고 순천에서의 사형집행, 급조한 악법에 따라 이루어진 한국전쟁 시기의 숱한 사형집행 또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었으며, 정치적, 이념적 반대세력에 대하여 억울한 누명을 덧씌우고 어처구니없는 무지를 이용한 사법살인 내지는 사법학살의 결과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근현대사 약 200여 년의 기간만을 따져 보더라도 예상과 달리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형보다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자에 대한 사형이 압도적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사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67.9%의 국민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3. 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아를 구분하여 죽고 죽이기를 반복했던 한국전쟁 기간, 당시 정권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라는 대통령긴급조치를 급조하여 적을 돕는 이적행위를 한 부역자를 가려내어 사형으로 말살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UN 소속 영국군의 주둔지 인근에서는 부역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단심 재판에 의해 평상시라면 5년의 유기징역도 부과되지 않았을 범죄로 사형으로 정죄되어 국가 불법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은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가 빚어낸 일이었고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반인권적인 법령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법령은 1960년까지 존재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만 1975년 5월, 유신체제 아래에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이라는 명칭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 후 권위주의 정권이 극에 달하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올 때까지 이 법령은 야수의 이빨을 숨긴 채 생명력을 이어왔고, 1989년 6월, '전시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 뒤 1990년대 문민정부에서부터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전시대기법령'으로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휴면상태로 있겠지만, 만에 하나 전쟁을 비롯한 국가위기의 상황에는 다시금 긴 잠에서 깨어나 단심 재판에 의한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어왔던 형법을 비롯한 형벌규범에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할 뿐이라는 신뢰는 전혀 온당치 않는 일입니다. 사형집행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는 온건한 태도 역시 사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오해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4. 사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

사형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5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형법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학자로도 유명한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에서 사형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형 지지의 입장과 폐지의 입장은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지지자는 응보필벌의 복수가 곧 정의의 실현이며 부수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듭니다. 그리고 반대자는 오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회복 불가능성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사적 복수가 널리 허용되었고 따라서 나와 나의 가족, 나아가 내가 소속된 집단에 가해지는 부당한 공격과 침해는 복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국가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설령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이 일어나더라도 국가는 그것을 개인 간의 분쟁으로 간주하여 가급적이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에 직면하여 포로로 잡혔지만 굴복당하지 않는 적에 대한 처리의 문제가 놓고 국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즉, 식량을 비롯한 한정된 자원을 적에게까지 분배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적의 목숨을 단번에 끊는 것이었고,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이름으로 사형이 일상화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자신의 신민으로 복속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가가 가지게 되면서, 달리 표현하자면 국가의 통제력 안에 이들을 관리하고 교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되자 감옥이라는 감금시설을 고안하게 됩니다. 범죄자 역시 국가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는 적으로 간주되었기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계몽시대를 지나면서 나타나게 되는 사형의 완화와 폐지의 추세는 국가가 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그 통제력 또는 통치 시스템 안에서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다는 검증된 믿음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국가 논리의 핵심에는 외관상으로 국민적 여론이 전면에 등장하지만 그 본질은 그만큼 해당 국가의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국민을 그의 통제력 안에 둘 수 없음을 자인하거나 국가의 정치체계가 불안정하거나 민주적이지 아니한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형벌의 외관 그러나 형벌이 아닌 사형

사형 지지자의 핵심 논거인 복수의 속성은 솔직히 말하자면 인간의 본능적인 보복욕구의 충족 이외에 정의를 비롯한 어떤 다른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정확히 셀 수조차 없는 사형집행 가운데 이른바 반인륜적인 생명 침해 범죄자들에 대한 집행이 있었고, 지금도 60명의 사형확정자가 생존해 있지만 국가는 이들을 교수대에 세우거나 세울 것을 경고하는 위협 이외에 이들에 의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형의 집행을 통해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목적이라는 것도 과거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관용어처럼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존엄한 인간은 그가 사형확정자라고 하더라도 단언하건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심각한 인간 존엄 말살의 결과를 우리는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단순한 보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에 있습니다.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올바른 전제는 진정 어린 반성과 용서와 화해에 있지만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문명사회의 형벌이 감당해야 할 절반의 기능조차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형벌이라고 할 것입니다.

6. 사형의 치명적 결함 : 되돌릴 수 없는 오판의 결과

사형의 가장 큰 폐해를 꼽는다면 그것이 의도되었든 실수에 의하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판단의 오류인 오판을 회피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매년 사형을 일정하게 집행해 오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나타나는 오판 문제가 확실한 정보와 통계적 근거를 토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의 오판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판사로 재직했던 이찬형이라는 분은 독립투사에게 어쩔 수 없이 사형선고를 한 후 법복을 벗고 출가하여 평생을 불가에 귀의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오판을 진솔하게 고백한 사례가 없습니다. 2003년 10월,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113명의 판사들 가운데 69.9%가 오판에 의한 사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만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우리 법관들의 자질이 다른 나라의 법관보다 뛰어나고 전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오판에 의한 사형은 결코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사형확정자 61명의 판결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형집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사 또는 자살하여 사라진 사형확정자들이 있었고, 이 가운데 시종일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으며, 무죄가 의심되는 사정은 남겨진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흉악범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형의 폐지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강변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에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흉악범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 그 무고함의 신원(**伸寃**)은 누가,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7. 에필로그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 사형제도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은 폐지에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올해 2월 1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9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10월 10일, 20대 국회에서도 여덟 번째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헌법재판의 진행, 입법기관의 법안 제출이라는 일련의 과정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사형폐지로 나아가는 길이 평탄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헌법재판의 결과 그리고 법안 실정화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정서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에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형이라는 형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사형은 국가형벌권의 목록에서 반드시 최상위의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 형벌이라는 관념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형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말하기 이전에 사형이라는 형벌의 의의와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마주하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 그 당부를 말하는 것은 올바른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사형의 존속을 지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는 사형이 어떠한 형벌이었으며 어떠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강론글 3.

잠시 멈추어 생각할 시간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희망을 가지세요." 이 말은 장애인이 많이 듣는 모욕적 표현의 하나로 꼽힌다. 말하는 사람은 선의로 한 말일 텐데 이 말이 모욕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장애인의 삶을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마치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게 들린다. 처음부터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꽤 무례하고 모욕적임을 알게 된다.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그렇게 말한다면 말이다.

말하는 사람의 선한 의도가 듣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많은 소수자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 이주민에게 "한국인이 다 되었네요"라고 하는 말은 칭찬 같지만, 함께 살아도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한국인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주민이라면 아마도 그 의미를 빨리 알아차릴 것이다. 만일 이주민이 아니라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된다.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면, 이런 말이 어떻게 배타적으로 들리거나 이주민으로서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무시한 한국 중심적인 생각을 깔고 있는지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잠시의 시간을 내어 상대의 입장을 살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냐고 말하기도 한다. 말하는 사람의 선의를 듣는 사람이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해보면, 나의 선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만큼 서운한 때도 없다. 게다가 그 선의로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헌신했을 때, 그 정성을 몰라주는 상대가 야속해진다. 우리에겐 자신의 선의와 헌신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슴속 어딘가 깊숙한 곳에 있으니 말이다.

누군가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모욕으로 느껴지는 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런데 아마도 실제로 이렇게 직접 속마음을 꺼내어 이야기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말에 모욕적이라고 느꼈더라도 그 사실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곤 한다. 상대의 선의를 알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넘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상처가 없는 것이 되진 않는다. 차곡차곡 모욕감이 쌓이는데 듣는 사람에게 계속 감당하라고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중 과연 누가 바뀌어야 하는 건지 생각하게 된다.

단지 말의 문제는 아니다. 말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문제라면, 그 생각은 결국 태도와 행동으로 나오곤 한다.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한 사람이, 혹시 자녀가 장애인과 같은 반에서 지내는 걸 반대하지는 않을까? 이주민에게 한국인이 다 되었다고 격려를 건넨 사람이, 혹시 동네 모임에서 이주민을 대표자로 뽑는 것에 반대하진 않을까? 이 상황은 얼핏 모순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이주민을 함께 생활하는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고 열등하고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격려와 거부 두 가지가 같은 사안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들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다가서면 불편해하곤 한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꽤 불편한 진실을 알려준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상대의 열등함을, 반대로 말하면 나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경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위안을 받는다는 건 무서운 일이기도 하다. 상대를 돕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우월한 위치를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상대의 불행이 계속되도록 놔두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한 마음이 어쩌면 불평등과 차별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한 행위가 실제로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많은 소수자들이 일상의 장소에 잘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장애인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친구와 동료로 일상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수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특별한 장소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누군가가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 활동을 하는 것은 선한 의지의 행동이겠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이 계속하여 사회에서 분리되고 고립되어 생활하는 상황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할까.

나는 짧지만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고민하곤 했다.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종종 '천사'의 이미지가 덧씌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은 얼핏 칭찬과 존경같이 보이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헌신'의 결과가 상대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면, 오히려 그 자체가 구조적 차별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척 두려운 일이 된다.

소수자와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이들에게 험난한지 잘 알고 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에게 더 많이 노력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부모가 없어서, 지방 출신이라서, 배우지 못했으니 '극복'하라고 하는 말들은, 세상의 차별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나온 말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격려일까. 혹시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닌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책임을 그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에게 지우면서, 상대를 위한 선한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말은, 그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나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이를 감당해야 하는 모든 짐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말이기 때문에 더 모욕적일 수 있다. 단지 선의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기엔, 이 거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이겨내라는 그 요구가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영화 <아프리칸 닥터>에서는 이민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우리 같은 흑인은 실력이 좋아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며 학교생활을 잘 하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이렇게 반문한다. "왜 흑인은 더 노력해야 하는데요?"

특정한 소수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지역, 학력, 피부색, 출신 국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경제적 수준 등 온갖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 존재한다. 우리는 각자 어떤 면에서 다수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기도 하지만, 소수자가 되어 더 많이 노력하라고 요구받기도 한다. 차별은 이렇듯 복잡한 현상이지만, 그렇기에 그 경험들을 반추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한다. 다수자의 위치에서 보지 못하는 차별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 평생에 걸쳐 하는 고단한 노력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를,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선한 의지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새로 배우면 좋겠다. 누가 누구를 '돕는' 위계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드는 동료의 관계로 말이다. 모두가 존중받으며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으면 좋겠다. 이런 연대의 약속이 희망을 가지라는 무책임한 말보다 우리 모두에게 훨씬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론글 4.

국가 범죄는 국가가 책임져라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지난 9월 23일 오후 국회 본관 446호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과거사법 대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실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유족과 피해생존자,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잠시 환호성이 터졌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지 9년 만에 과거사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과거사법은 이미 지난 6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었지만, 이에 불복한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키면서 두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되었다.

이제 과거사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과거사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수히 많은 변수와 난관이 남아 있다. 그 첫 관문인 법안 소위 통과를 두고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진 진실규명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뒤이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반공을 앞세운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길은 험난했다. 전후세대에 이르기까지 대일항쟁기의 친일청산 문제, 권위주의통치시기의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사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기구를 통해 장기간 조사했지만 그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고, 가해자 처벌은 시도조차 하지도 못했다.

국가 조사 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한국의 과거사 청산도 중단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진 15개 과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통폐합 대상이었다. 폐지를 전제로 한 통폐합 시도가 유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치자 결국 과거사위원회는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이 기본 활동 기간만을 채운 채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 운동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고, 2010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유족, 피해자들은 줄곧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해마다 입법토론회, 과거청산 결의대회, 학술대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고, 국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개정을 촉구해왔다. 유족들은 청와대 앞, 국회 앞에서 여전히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은 국회 앞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가 방치한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매장지를 찾아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도 했다.

포괄적 과거청산을 표방하며 노무현 정부가 설립한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침해 사건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활동 기간 중 10,860건의 신청 사건과 직권조사 사건 15건, 그리고 분리·병합 처리한 사건 등을 합한 총 11,175건을 처리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해 인민군 점령기 이후 부역혐의 희생사건, 미군 폭격에 의한 희생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을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은 재일동포, 납북어부 등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 강제해직, 노동권, 재산권 피해, 의문사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재심을 권고하였고, 대다수의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국가기구를 통한 조사는 많은 오류와 한계를 남겼다. 특히 의문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그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은 하지 못했다. 가해자 처벌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한 채, 사실관계조차도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간접증거와 정황 등으로 사건을 일부를 정리했을 뿐이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해발굴조사의 경우 진실위원회 활동 당시 전국 168개 지점 중 13개소를 발굴하여 1,600여 구를 수습하는데 그쳤다. 그 후 현재까지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8차에 걸쳐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을 통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은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유해발굴조사, 배보상특별법 추진, 과거사재단 설립 등의 후속 조치 이행에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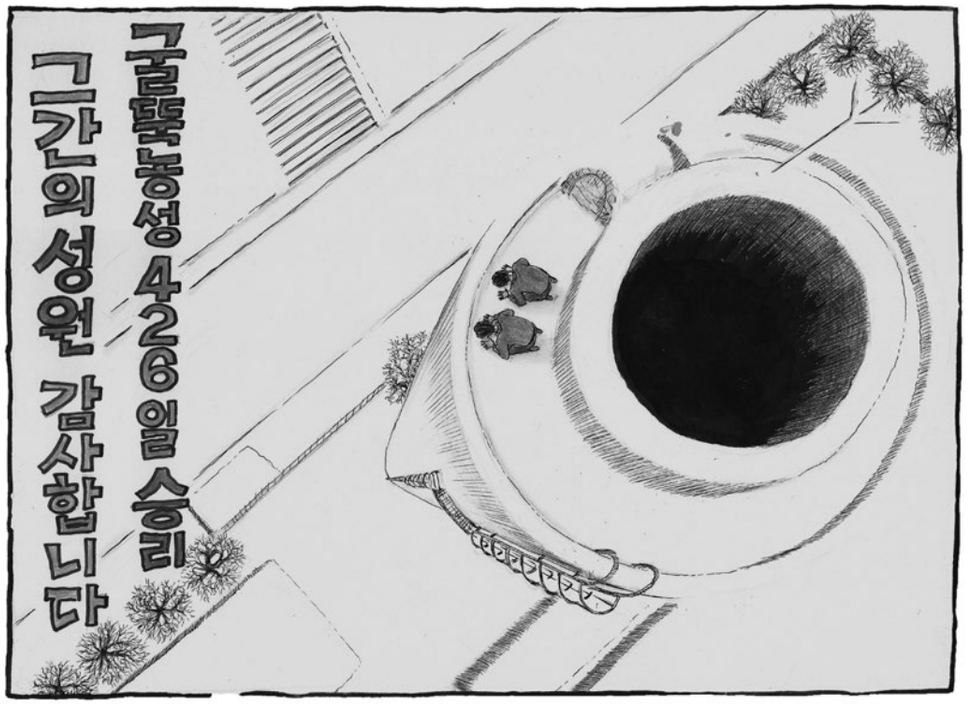
시민단체와 유족, 피해자들이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전쟁 전후 국가공권력에 의해 집단학살 된 수많은 민간인과 군사독재시절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 상해, 실종된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를 설립해서 진상규명해 달라는 것이다. 과거 진실위원회의 신청기간을 놓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족의 경우, 전남과 충남지역의 전수조사결과 약 3,000여명에 이르고,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도 납북어부, 재일동포간첩조작사건 등 수천 건이 진실규명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사건 등의 강제수용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회의 과거사법 개정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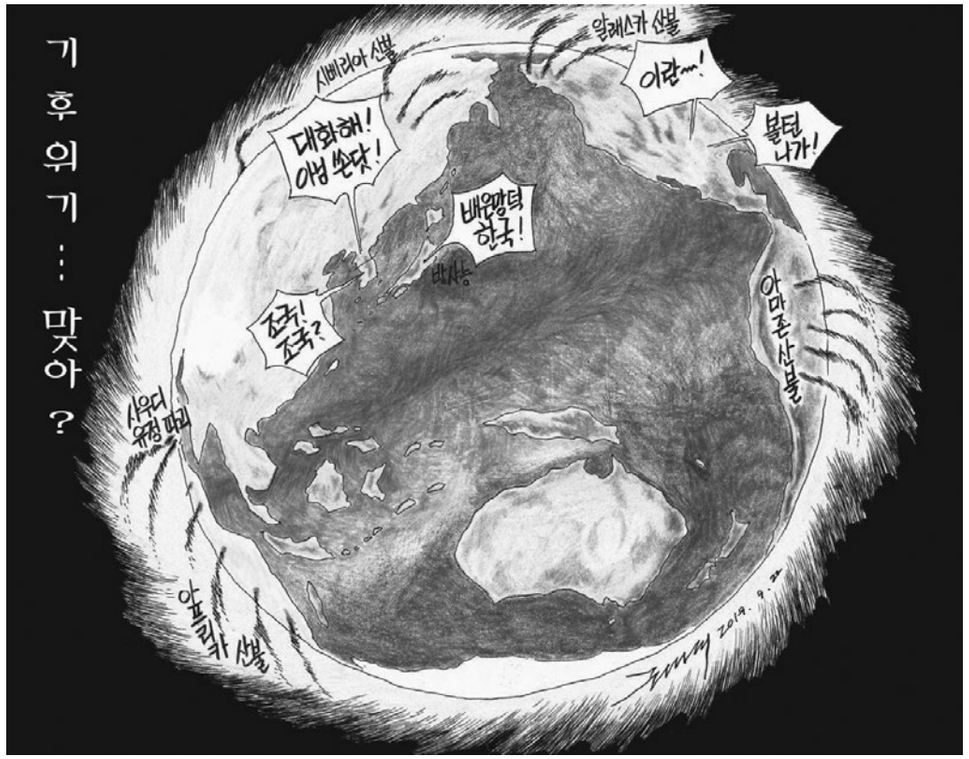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와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이름조차 갖지 못한 영아부터 힘없는 부녀자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한 희생자가 최소 50만 명이 넘는다. 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없이 학살된 형무소 재소자도 수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또한 군사독재 정권기의 인권침해 사건들 대다수도 국가가 가해자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생과 노동자, 양심적인 정치인들을 함부로 체포했다. 오랜 기간 불법감금한 상태로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하여 관제 간첩과 조직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은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가정은 해체되고 그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트라우마를 겪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국가폭력, 국가범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017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그 세 번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청산”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이제라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상처를 보듬고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국정원법 개정!
국정원 대개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진상을 규명하고
대공수사권 이관하라!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개정 촉구
국정원 앞 하루 투쟁
- 일시 : 2019년 11월 4일(월) 08시 ~ 18시 - 장소 : 국정원 앞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 대책위원회

고권일의 그림 이야기


굴뚝농성 426일 승리
그간의 성원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맞아?
시베리아 산불
알래스카 산불
이럼...!
대화해! 애생쏜닥!
불던 나가!
배웅할덕 한국!
반사!
조국! 조국?
아마존 산불
시우더 유정 폐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2019. 9. 22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친다!
비례대표 확대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나만 폭을순 없다!
왕따
선거연령 만18세
다당제로 왕따...?!!
2019 3. 22





2019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

수록된 네 가지 주제를 비롯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일 강론을 필요로 하시는 본당에서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권주일 2차 헌금 • 특별후원금을 기다립니다

인권주일 2차 헌금 후원 및 인권주일 특별후원금을 부탁드립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부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으며 오직 각 본당에서 보내주시는 인권주일 헌금과 후원회원님들의 후원회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정기후원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 증액, 정보 변경 등 모든 후원관련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rights.or.kr/ 후원안내 - 후원하기

지로번호 7618893
국민은행 004-01-0724-877
우리은행 454-035589-13-101
우 체 국 010017-02-544517
농 협 301-0076-9349-51
예 금 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적극적인 대일외교와
모든 수단을
촉구하고 이행하라!
지울수록
벤지리라
입본어
사과만 하면
나는 편히
눈감는다
-김복득 할머니
내청춘을
돌려주십시오.
소녀들의
행복은
언제올까요
빼앗긴
소녀들의
청춘은?
지시
않았
습니다
눈물



발행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행인 김형태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전화 02)777-0641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